

“신속 추경으로 수해 복구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침수 피해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충남 부여 방문 “재정건전성 논할 때 아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명확한 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정부의 대대적인(수해) 피해지원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충남 부여를 찾은 자리에서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일

지된 호소를 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재정을 너무 노려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또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수해 복구 봉사 현장을 찾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충북 오송 공평2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명확한 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이 확실하다”며 “공무원들 탓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 지휘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무원들은 해바라기라고 한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움직이는데 직접 공무원들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김영환 충북지사 태도가 기가 막힌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버려두고 ‘한두 명 죽거나 다친 줄 알았다’며 그래서 탄 데를 가봤다는 그 마인드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들지 않느냐”며 “(인타넷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무정부 시대라고, 통째로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자조적 표현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與 “역대 모든 정권 풍수지리에 관심”

尹 관저 풍수 자문 해명

국민의힘은 25일 작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 입학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풍수지리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 때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가 하면 전통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인이라는 내로남불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얼토당토않은 억지 프레임 씌우며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트립 잡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기를 바란다”고 꼬아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경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무속 프레임을 거는데, 모든 역대 정권 중 풍수지리에 관심을 안 보인 정권은 사실 없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관련 후보지 선정에 풍수지리를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하는 것은 편향고 남이 하면 무속이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윤석열 정권만 마치 풍수지리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재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본인(민주당)들이 물어볼 때는 전문가고 다른 쪽에서 물어보면 갑자기 국정농단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가상자산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 추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재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국회법·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장관 등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비명계 ‘체포안 기명투표’ 반발

조웅천 “낙천운동 일어날 것”... 공천을 개정에도 부정적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혁신으로 당내 결집을 이끌기 보다는 설익은 발언으로 당내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혁신위가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 경에는 내년 총선 공천 틀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진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25일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혁신위의 제안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조웅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

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의 내년 총선 공천 료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갈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5만명을 넘겨 지도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을 채우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당내 주류인 친명 진영에서 혁신위를 등에 업고 공천 전쟁에 나서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공천 료 개정을 통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년 총선에 공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친명 인사들의 공천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외면하게 만들면서 내년 총선에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힘 윤재욱 “체벌 부활 안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력자 ‘학부모갑질·민원 조력’로 변질됐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체벌이 부활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체벌과 관련하여도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들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탈락 유감”

이게호 의원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게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25일 “지역상생 1호공약으로 추진되었던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탈락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에 신속한 추가 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치를 간절히 열원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와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있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RE100 실현의 최적의 입지조건과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 한국에너지공단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우수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반도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기존산업

이 포화상태인 수도권 경기도 용인·평택, 경북 구미 2곳을 선정한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 시키는 근시안적 결정이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이번 유치 실패로 광주·전남 시, 도민의 실망과 좌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광주·전남이 가진 반도체 산업 잠재력이 국가첨단산업 대도약으로 이어지기를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광주·전남에 대한 반도체 특화 단지의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최우선 실천을 통해 지방소멸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